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12차 협약'

도-전주시-완주군, 지난 3월 11차 협약 이후 6개월여 만에 '한자리에'

완주 소양면~전주 금상동 경계 '마월 소하천 정비사업' 공동 추진키로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도청 3층 중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와 12차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1차 협약 이후 6개월여 만에 12차 협약을 통해 상생협력사업의 보폭을 지속해서 넓혀 가고 있다. 이로써 도와 함께 양 자치단체가 발굴해 추진하기로 한 상생협력사업은 모두 27건으로 늘어났다.

이번 12차 협약에서는 '마월 소하천 정비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마월 소하천'은 완주군 소양면과 전주시 금상동 경계에 있는 소하천으로 마월마을 일부 농지의 경우 소하천보다 지대가 낮아 매해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으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빈번한 상황이다.

특히, 해당 지역은 기존 배수로 시설이 과거 기준으로 설치되어 늘어난 수량을 감당하기 어렵고, 곳곳에 침수 피해를 보고 있어 자연재해에 대비한 정비사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마월 소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비 약 45억 원을 투입하여 축제·보축(2.54km) 시행으로 태풍 및 집중호우에 따른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과 지역 주민들의



11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하여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와 12차 협약식'을 갖고 있다.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2차 협약식에 앞서 현재까지 11차례에 걸친 26개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그간 협약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 사업들을 발굴 추진해 '상생협력사업'

에 대한 주민 호응과 인지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은 '22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1차례 협약으로 5개 분야 26개(문화·체육·관광 10, 지역경제 6, 도로·교통 4, 안전·환경 4, 농업·교육 2) 사업들이 순항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703억원

을 투입해 주민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함께 협력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완주와 전주의 지역간 경계는 허물고 지역은 살리는 완전한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상호유통 및 공공시설 이용료 상호 할인', '도서관 문화 협력사업(도서관 회원권기증 등)', '찾아가는 예술 공연', '전주농남학사 입학생 완주군민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로 완전한 경제 공동체 구축을 위해 '완주·전주 시티투어버스' 공동 운영, 만경강 청년 축제 '일막상풍'과 전국 초청 '상생발전 한마음 파크골프 대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양 지역 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상습 침수 피해지역 재해예방을 위한 '공덕세천 정비사업'과 '삼광저수지 힐링공원', '파크골프장(구이, 고산, 용진), '혁신도시 체육공원'을 조성한다.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간 연결성 강화를 위해 '예곡시터~삼봉지구 도로 확장(2차로→3차로)'과 '전북혁신도시 진입도로(지방도 702호) 국도 승격'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 상황 점검과 현장 행정 등을 통해 상생협력사업들이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방조제 클린 동행 캠페인' 추진

국제 연안정화의 날 맞아, 도·15개 기관 등 270여명 참여 신시도항~아미도 방조제 구간, 해양폐기물 6톤 수거 등

전북특별자치도는 '제24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을 맞아 11일 오후 새만금방조제 신시도항에서 아미도항까지 2.1km 구간을 대상으로 '새만금방조제 클린 동행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시, 군산해양경찰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군산시수협, 어촌계 및 민간단체 등 15개 기관·단체 관계자 등 27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방파제 석축 내에 쌓인 각종 부표와 플라스틱 쓰레기,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참여자들은 사전에 해양안전 및 사고예방 교육을 받은 뒤 안전하게 정화활동을 진행하여 약 6톤에 달하는 쓰레기를 수거했다.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활동은 어업 활동 중 발생한 쓰레기와 해양으로 떠돌아다니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SNS 홍보 이벤트도 함께 진행했다.

해양 정화활동 관련 영상을 SNS 계정에 게시하고 이를 네이버폼에 등록하면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는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의 미래 교육 혁신 위해 '맞순'

전북인재개발원-한국강사협회, 교육협력 업무협약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원장 노형수)이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교육 혁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국강사협회(회장 강대경)와 체결하며 전문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은 11일 노형수 전북인재개발원장과 한국강사협회 강대경 한국강사협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약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인재개발원과 한국강사협회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 콘텐츠 강화하고, 우수 강사 역량을 높이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강사협회의 우수 강사 네트워크를 활용한 강사 정보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공유 활성화와 △인재 육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 △교육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전북자치도 교육의 질적 향상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인재개발원과 한국강사협회는 양 기관의 장점과 자원을 결합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 더 나아가 도내 다양한 산업, 기술, 법률 등 전문 분야에서의 교육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도, 탄소소재 활용 혁신의료기기 산업 육성 '쟁걸음'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진흥 기본구상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차세대 의료기기 산업발전 전략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가 탄소소재를 활용한 혁신 의료기기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국내외 시장 선점을 위한 쟁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11일 '탄소소재 혁신 의료기기 기술진흥 기본구상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바이오반위산산업과, 전주시, 전북대병원, 한국군수산업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전북대학교병원이 주관

했으며,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 진흥을 위한 특례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지역 내 의료기기 관련 인프라와 기술력을 고도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탄소소재는 경량성, 내열성, 내식성, 고강도 등 우수한 물리적 특성 덕분에 다양한 산업에서 주목받고 있는 핵심 소재로, 특히 의료기기 분야에서 인체 삽입용 기기 개발에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CFRP)를 기반으로 한

인공 관절, 스텐트, 임플란트 등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 개발 가능성이 특히 강조됐다.

전북자치도는 그동안 탄소소재 의료기기 산업의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다. 지난해 전북대병원에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를 설립했으며, 올해 5월에는 보건복지부의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인체삽입형 신소재 분야에서 탄소소재를 적용한 의료기기 개발, 시제품 제작, 실증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체삽입형 신소재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힘을 기울인다. 또한,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해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에서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선순환적인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탄소소재 의료기기 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추석 앞두고 공사대금 체불 사례 없다"

새만금청, 스마트 수변도시·옥구배수지 등 건설현장 특별 점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새만금 건설 현장의 공사대금 지급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단 한 건의 체불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에 시행된 특별 점검에는 새만금개발청 직원들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새만금옥구 배수지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건설 장비 및 자재 대금 지급 현황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현금 지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와 수급인·하수급 간 부당 계약 여부 등이 있었는지 꼼꼼하게 살펴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섰다.

윤순호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최근 새만금 개발이 가속되고 있는 만큼, 공사대금 체불을 근절하여 이로 인한 공사 지연을 원천 차단하겠다"라면서, "새만금의 공사 현장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항시 체불 제로(ZERO)를 유지하여 새만금 지역에 기반 시설을 적기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 전에 새만금 건설 현장의 공사대금 체불 실태 점검을 시행하여 건설근로자와 공사관계자들이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이만호 기자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근거 마련

김성수 도의원 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최근 3년간(2021~2023년) 전제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4만 6,650건, 2022년 4만 5,199건, 2023년 4만 6,14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된 이번 조례안은 사회 안전 약자에게 안심 물품 지원사업 등을 통해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례안에는 사회 안전 약자를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 수립·추진 등 도시사의 책무 규정, 안심 물품 지원사업 대상 및 시행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성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여성·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 기울여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 고병원성 AI 발생 시 가상방역 훈련 진행

전북자치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대비 실전 같은 가상훈련 실시
전북특별자치도는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하여 실제 상황과 유사한 가상방역 훈련을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목천동)에서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자치도가 주관하고 익산시가 주최하며, 환경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훈련은 군산시 금강하구에서 발견된 철새 폐사체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후, 익산시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AI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질병 확산 방지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동원 계획, 통제조소 설치,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의 절차를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고병원성 AI 발생 시 초동방역 조치와 유관기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전북자치도는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AI 재난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산업재해 예방 위한 전문 교육 근거 마련

김동구 도의원 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41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동구 의원은 "전북자치도 2024년

산업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8월말 기준 14명으로 작년 사망자 13명을 넘었다"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초기방재를 위한 방재 물품 정비확보 및 점검, 산업안전지킴이단 운영, 안전시설물 보강지원사업 등이 있으나, 직접교육사업은 없어서 이번 조례 개정안이 산업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